

대법원 2017다219232 손해배상(기)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451)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구글서비스이용자인 원고들이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이하 '피고 구글'), 피고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이하 '피고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의 제3자 제공현황 공개 및 공개 거부에 대한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❶ 원고1,2가 피고 구글과 체결한 구글서비스 이용계약은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비자계약이므로, 위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피고 구글에 대한 소를 제기한 것은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고(구 국제사법 제27조 제4항),

❷ 위 원고들은 준거법합의에도 불구하고 강행규정인 우리나라의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4항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❸ 구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이용자의 열람·제공 요구권(제30조 제2항)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내재적 한계가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열람·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특히 외국법령이 비공개의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외국법령의 내용도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❹ 그와 같은 외국 법령의 존재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고, 해당 외국법령에 따른 비공개의무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등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이 비해 그 외국 법령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비공개요건이 충족되어 실

질적으로 비공개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⑥ 나아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한·거절하여야 하고, 특히 국가안보, 범죄수사 등의 사유로 외국의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가 이미 종료되는 등으로 위 정보수집의 목적에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이용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사실을 열람·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미국 법령에서 비공개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고 구글이 그 정보의 제공현황을 원고1,2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본 원 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원고1,2의 피고 구글에 대한 패소 부분)**하였음(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1. 사안의 개요

- 원고 1, 2, 5, 6은 피고 구글이 제공하는 지메일 등 구글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들, 원고 3, 4는 피고 구글이 제공하는 기업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임
- 원고들은 피고 구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의 제3자 제공현황의 공개 청구 및 공개 거부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참조사항]

1. 국내법인인 피고 구글코리아(국내법인)에 대하여
 - 국제재판관할합의 × 준거법 합의 ×
 - 따라서 원고들이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열람·제공 요구를 할 수 있음
2. 미국법인인 피고 구글(미국법인)에 대하여
 - 국제재판관할합의 ○¹⁾ 준거법 합의 ○²⁾

1)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연방 또는 주 법원’으로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였음.

- 원고들이 (위와 같은 관할합의, 준거법합의에도 불구하고) 구 정보통신망법³⁾ 제30조 제2항에 따른 열람·제공 요구를 할 수 있을지 부터 문제됨
- 구 국제사법 제27조⁴⁾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계약’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는데, 이 사건 원고1,2는 구 국제사법 제27조상의 소비자에 해당하여 후술하듯이 그 보호를 받았음

2. 소송의 경과

▣ 제1심: 원고들 일부 승

▣ 원심: 원고들 일부 승

● 원고1,2의 피고 구글에 대한 청구

- 원고1,2가 상거소지국(소비자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인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 구글에 대한 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함
- 원고1,2는 상거소지국인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인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열람·제공을 피고 구글에게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미국법령에서 비공개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피고 구글은 원고1,2에게 그 열람·제공을 거부할 수 있음

● 원고3,4,5,6의 피고 구글에 대한 소: 부적법(∴ 전속적 재판관할합의)

● 원고들의 피고 구글코리아에 대한 청구: 일부 인용

- 피고 구글코리아는 위치정보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므로 열람·제공요구에 응해야 함

● 위자료청구는 모두 기각

- 정보공개로 회복될 수 있는 손해이고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들 및 피고들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⁵⁾

2) 이 사건 분쟁에 관한 준거법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로 정하였음.

3) 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 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5) 원고 5,6은 상고를 취하하였음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이 사건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의 유효 여부
- 구 국제사법 제27조 소비자계약에 대한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의 효력
- 위 소비자계약에 대한 준거법 합의의 효력
- 구 정보통신망법상 열람·제공 요구를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비공개의무를 부여하는 외국법령이 존재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취해야 하는 조치

나. 판결 결과

- **일부 파기환송**(원고1,2의 피고 구글에 대한 패소 부분)

다. 판단 근거

- 이 사건 전속적 재판관할합의는 유효함⁶⁾
 - 이 사건 분쟁은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음
 - 이 사건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연방 또는 주 법원'은 캘리포니아주 법령⁷⁾에 따라 위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짐
 - 피고 구글의 본사 소재지, 구글 서비스 제작·운영의 주요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 등을 고려했을 때 위 미국 법원은 이 사건 분쟁과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짐

6)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②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③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④ 그와 같은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관할 합의는 유효하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7) 민사절차규정(Code of Civil Procedure) 제395.5조 등

- 국내이용자들이 위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에 시간, 비용 등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속적 재판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공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다만,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의 소비자계약에는 위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 구 국제사법 제27조는 상거소지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대방의 광고 등에 이끌려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하게 된 수동적 소비자가 가지는 상거소지국의 소비자보호규정 적용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보호하면서, 외국법원 등에 소를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소비자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임

구 국제사법 제27조(소비자계약)

①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1.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그 국가 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소비자는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합의는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2. 소비자에게 이 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 ➡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데에는 신중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소비자의 나이, 성별, 위치, 행동 패턴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는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비자가 계약상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용료 등 대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비자계약에서 제외할 수 없음
- 한편, 당사자 간에 국제재판관할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분쟁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내용도 부가적 관할합의가 아니라 전속적 관할합의에 해당한다면, 그와 같은 합의는 소비자계약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함(☞ 소비자인 원고1,2는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에도 불구하고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그 상거소지국 법원인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 구글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원고1,2에 대해서는 상거소지국 강행규정인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4항이 적용됨

- 구 국제사법 제25조는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 선택에 당사자 자치를 허용하는데,⁸⁾ 이러한 원칙은 소비자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만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비자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상거소지국 강행규정이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보호를 박탈할 수는 없음
- 이는 구 국제사법이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보호가 당사자 간의 준거법 선택으로 쉽게 박탈되지 않도록 그 준거법 합의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고 따라서 소비자계약의 당사자가 소비자의 상거소지국이 아닌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에도, 소비자의 상거소지국 강행규정

8) 제25조(당사자 자치)

①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함

- 한편,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4항의 목적과 취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 조항들의 기능과 역할 및 그 위반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부과되는 제재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원고1,2는 위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4항의 보호를 받음)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의 열람·제공 요구권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거절·제한할 수 있음

-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열람·제공 요구권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고, 헌법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등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요구한 정보의 열람·제공이 다른 법률 등에 의해 금지·제한되거나, 이를 허용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

■ **비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외국법령이 존재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취해야 하는 조치**

-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함께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외국 법령에서 해당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열람·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외국 법령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열람·제공의 제한이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와 같은 외국 법령의 내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결국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함께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❶ 해당 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등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❷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그 외국 법령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❸ 이용자가 열람·제공을 요구하는 정보에 관하여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비공개요건이 충족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실질적으로 비공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등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한·거절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특히 국가안보, 범죄수사 등의 사유로 외국의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가 이미 종료되는 등으로 위 정보수집의 목적에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이용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사실을 열람·제공해야 함

4. 판결의 의의

- **[국제사법 관련]** 이 사건은 다국적기업인 피고 구글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서 구 국제사법 제27조(현행 국제사법 제42조, 제47조에서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의 해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사안임

- ❶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따른 소비자계약의 의미
- ❷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제재판관할 특칙(구 국제사법 제27조 제4항) 및 소비자계약에 대해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의 효력을 제한하는 목적과 그 취지(같은 조 제6항)
- ❸ 구 국제사법 제27조에 따른 소비자계약에도 준거법 선택에 관한 당사자 자치가 적용되지만, 소비자의 상거소지국 강행규정의 보호를 박탈할 수는 없다는 점(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 ❹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4항은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소비자의 상거소지국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따라서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둔 소비자들이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4항의 해석 관련] 이 사건은 개인정보의 열람·청구와 관련하여서도 아래와 같은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사안임

- ❶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열람·제공 요구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공개 거부·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위 요구권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제한·거절 가능)
- ❷ 비공개의무를 부여하는 외국법령이 존재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비공개의무를 부여하는 외국법령이 존재한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함)
- 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취해야 하는 조치(=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한·거절사유 통지해야 하고, 특히 정보수집의 목적 종료 시 이용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야 함)

■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외국법령에서 비공개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가혹

하고 국제예양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와 같은
외국법령을 정당한 사유의 판단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실시하면
서도, 그와 같은 법령의 존재 외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실시함으로써 외국법적 요소가 있는 정보공개 사안에서
국가들 간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